

대북 비료지원 승인... 남북관계 돌파구 열리나

5·24 조치후 처음... 에이스경암에 15t 허용

정부, 투명성 담보 소규모 지원 승인 방침

북한이 연일 맹비난해온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끝나자마자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승인해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작년 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초청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 달 방북할 것으로 예상돼, 냉각된 남북관계에 훈풍이 풀 것이라는 기대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27일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사장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의 온실조성사업을 위한 육로 방북과 함께 15t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도 함께 승인했다.

정부는 그동안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북 비료지원 승인은 주목을 받았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작년 3월 초 대북 비료지원을 추진했을 때 당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직접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정부의 금지 방침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드레스덴 선언에 농축산 협력이 주요 제안으로 포함되면서부터 이 같은 방침은 조금씩 후퇴하는 기류를 보이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0월 통일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마을 단위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비료 지원”을 언급했고, 류 전 장관도 같은 해 11월 민화협 강연에서 “투명성만 담보된다면 북한 농업·산림지원 사업에 소규모 비료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올해 들어 에이스경암 등 민간단체 2곳이 대북 비료지원을 신청했고, 이날 5·24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15t 규모로 비료지원 승인이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성이 담보되는 소규모 비료 지원은 승인할 방침이나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현재로서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정서를 고려한다는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5·24 조치 이후 사실상 막혀 있던 대북 비료지원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국면 전환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김대중평화센터가 다음 달 말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도 열어붙은 남북관계의 해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여사는 방북 기간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여사 측이 북측과 사전협의의 를 거쳐 방북 신청을 하면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재 상황이라면 이 여사 측에서 방북 신청을 하면 정부는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가 성사된다면 남북 당국 간 대화가 필수적이다. 남북 간 이견을 보여준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의 해결 여부가 당국 간 대화 본격화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24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이날도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동국대 박명호 교수(뒷줄 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안 수정권 포기”

이병석 위원장 공청회서 밝혀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27일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할 때 국회가 수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개특위 밖 독립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면, 만든 안을 정개특위에서 수정하지 않는다는 게 큰 방향”이라며 “(특위에) 수정 권한이 없고, (행사를) 안 하려고 그러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3대1인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 소속으로 선거구 획정위를 두고 있으며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하면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자 가운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정당의 원내대표와 협의해 11명 이내에서 위촉한다.

이 위원장은 다만 “정개특위가 수정 권

한을 행사하지 않되, 선거구 획정 권한의 ‘원천’인 입법부로서 획정안을 보고받고, 정개특위 위원들의 질의와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본회의에 넘기는 게 어렵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과도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안 수정권한 포기에 대해 대체로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대부분 정개특위의 획정안 수정 권한 포기과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선거구 획정) 국회의 전횡, 당리당락의 타협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중립기구가 획정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획정위가 반영을 하든 안 하든 정개특위의 의견 개진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최한수 명예교수도 “정개특위의 의견 개진을 거치는 게 국회 본회의 가결까지 가는 과정에 효율적일 것 같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안 수정 권한을 포기할 경우 획정안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할 것인지, 거부 권한은 부여할지 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추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산단 연구개발 등 3520억 투입

혁신산단 선정... 2025년까지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국가산단)가 혁신산단으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이 지난해 12월 혁신산단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혁신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여수국가산단 혁신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20개 사업에 35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구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 정주 환경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혁신산단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생산·연구개발(R&D)과 기업 지원·복지·편의시설 등이 통합 입주하는 융·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발사업으로 공모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혁신지원센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혁신사업을 가시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

에서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시행했으며, 다음달 중 용역사가 선정되면 혁신산단 신청 시 제시한 사업과 추가발굴 사업 중 실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여수시는 다음달 중 혁신산단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산단 장의·혁신포럼과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혁신산단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9월 중 산업부에 혁신산단 시행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연말쯤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여수산단홍보관과 연구개발(R&D) 지원시설 등 건립, 산학융합지구와 혁신지원센터 건립, 기반시설 정비,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산단 테마홍보관, 건설안전체험교육관, 기업혁신R&D센터, 근로자 종합복지관, 산단환경개선펀드 조성, 기반시설 정비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r

광주시의회,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눈길’

박춘수 의원 발의

지자체와 금융기관 등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광주시가 의원 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한다.

광주시의회는 27일 “박춘수(남구3·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 책임자 지정과 역할 등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 장관에 등록과 변경 등을 해야 하고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없이 유출 시점, 내용, 경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줘야 한다.

조례에서는 또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조치와 피해·구제 절차 등을 담고 있고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열람, 삭제 등을 거절했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이를 심의할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광주시 분청 및 산하기관, 공사 및 공단, 시 출연기관 등에 모두 적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랑스러운 전남인 뽐습니다

도, 8월까지 6개분야 접수

추천권한 도민까지 확대

전남도는 국내의 각 분야에서 전남 발전에 이바지하고 전남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전남인’ 수상 대상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자랑스러운 전남인’ 선발은

경제, 관광·문화·체육, 사회봉사, 사회안전 등 6개 분야로 구분해 이뤄진다.

선발 대상자는 전남에 주소나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 증대,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에서 창의적인 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소득 증대에 기여했거나, 헌신적인 봉사도 도민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안겨준 도민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창사 63주년

대한민국은 에너지 충전 중

한국수력원자력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물론 수력·양수 및 신재생 에너지까지
언제나 든든하게 충전해 주니까

대한민국, 오늘도 힘차게 움직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리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 khnp.co.kr ■ facebook.com/ilovekhnp ■ blog.khnp.co.kr